

민주 '야권大통합' 불씨 다시 살린다

민노·진보·참여당 '小통합'에 위기

야권통합 특위 구성 국면전환 모색

민주당이 4일 야권통합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야권 통합'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의 노선과 정체성 등을 둘러싸고 통합에 대한 이견이 큰 현실이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모두 아우르는 '대(大)통합'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난 만큼 민주당이 야권연합과 통합에 대한 노력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야권 통합과 관련, "민주 진보진영의 모든 정당은 물론 현재 정당 영역에 진입하지 않은 개인과

정치세력, 시민사회세력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물론 시민사회 진영과의 대통합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야권 통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서로 간 차이는 극복 대상이지 분열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야권 통합의 마지막 충분조건은 민주당의 희생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다지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이인영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야권통합특위'를 본격 가동키로 선언한 것은 야권통합

지형에서 설 땅을 끊어버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오는 9월 통합진보당 창당을 목표로 착실히 수순을 밟고 있고, 여기에 국

민참여당이 동참 의사를 타진하면서 야권통합은 민주당을 제외한 '소(小)통합'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야권이 한 지붕 아래 뭉치는 '빅 텐트론'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민주당과 '통합 진보정당'의 양당 체제로 고착화되면서 총선 승리 및 정권 교체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야권대통합의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내년 총선 공천에서 민주당의 희생을 전제로 한 대통합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칠 전망이다. 이를 반영 하듯,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체성 차

이 등을 명분으로 통합보다는 연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크다.

아울러 손 대표의 '종북(從北) 진보' 발언으로 끌어 깊어진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개선도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손 대표가 야권통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배경에 대해 최근 대북정책 기조를 둘러싼 당내 논란을 진화하는 동시에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여파로 민주당에 불어닥칠 쇄신 바람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대통합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그릴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며 "하지만 여기에는 당내 반발과 타 야당과의 협상을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권을 꿈꾸는 손 대표에게는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바로잡고 서민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는 게 진보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라며 "재벌 개혁에 대한 청사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재벌 개혁의 핵심은 상속증여 문제"라며 "(재벌은) 과거 전환사례 등을 이용해 권법상 속았는데, 최근 변종으로 등장한 게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라고 덧붙였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상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재벌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과 당령 개정을 주장하며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정 최고위원은 "재벌의 오만함을

도 두렵고 해서 '귀대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중심으로 당시 회의 속 기록 작성에 쓴이 녹음기와 노트북, 정식 녹취록을 만드는 데 사용된 USB 메모리스틱과 데스크톱 등 자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향후 민주당 관계자 대신 당시 회의장에 접근이 가능했던 관계자 등 외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취록을 최초 공개한 한선교 의원에게 이날 중 출석요구서를 보내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연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에서 쓰는 녹음기 이외에 다른 녹음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 대한 실황조사를 벌인 결과 회의장 문이 두꺼워 외부에서 이른바 '귀대기'로 자세한 내용을 엿들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황 조사를 한 결과 대표실 구조상 밖에 서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문

/연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대기업 富 편법상속 성토

정동영 최고 "재벌개혁 특위 구성하자"

정치권과 대기업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재벌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에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은 이행하지 않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면서 "재벌이 많이 벌수록 중소기업과 서민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벌 총수의 2.3세들이 비상장회사를 세우고 그룹 전체가 일감 몰아주기에 몰입하는 편법상속이 자행되고 있다"며 "재벌사 직원들이 빠지지 일해 총수 가족의 배를 불려주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재벌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과 당령 개정을 주장하며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정 최고위원은 "재벌의 오만함을

경찰, '민주 도청' 외부 소행 잠정 결론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역포경찰서는 4일 내부 자료 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고 외부에서 도청이 이뤄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용역포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회의장에 있던 자료 분석 결과 내부 유출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외부 도청 가능성이 사수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민주당에서 쓰는 녹음기 이외에 다른 녹음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 대한 실황조사를 벌인 결과 회의장 문이 두꺼워 외부에서 이른바 '귀대기'로 자세한 내용을 엿들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황 조사를 한 결과 대표실 구조상 밖에 서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문

/연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수완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대지 : 10980㎡, 임야 : 13937㎡
케모이밀 23평형 37개동, 케모이밀 10평형 17개동 관리동, 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임비, 수리한국화, 수리원, 기도원, 청탁, 여유대지임을, 계획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 2억9천포함) • 실투자금 : 11억1천

모델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율산면 월산리 · 대지 : 1038㎡, 건물 1055㎡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 297실 월세비내리터 있을 유통선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속박업 지정업체

• 매매가 : 10억(근저당 3억6천대출승계가능) • 실투자금 :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수동 한국아밸리 읍후문부근 코너

• 대지 :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월류, 릴라, 접포형 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5천만원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녹지

• 대지 :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지 :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월류, 릴라 적합

• 매매가 : 1억3천원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광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 전,답 :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아 과일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광장용지및집증지 : 8480㎡ 광장부지 : 3192㎡ 외 집증지

담양옥과방면지선 도로점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 6억4천만원

대표전화 ☎ 511-6633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FAX(223-1772) 원 110-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전화)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 청정배 위원장이 4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당 개혁특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공천·전대를 막판 조율 진통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여성특례 조항 등 '빅3' 입장 달라

민주당 개혁특위는 4일 전체회의의

를 열고 총선과 대선 후보 선출과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선출 방법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벌였지만 이날 밤늦게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정세균 최고위원 등 '빅3'는 물론 혁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되면서 막판까지

지통이 거듭됐다.

일단 개혁특위는 총선과 대선 후보 선출 시 오픈 프라이머리(100% 국민결선) 전면 도입과 지도부 선출 시 전당원투표제 실시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배심원제 도입 여부와 여성특례 조항 강화, 지역 위원장 사퇴 시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개혁특위에서는 지역위원장의 선거일 4개월 전 사퇴안과 6개월

배심원제 도입과 관련, 정세균 최

고위원 측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동원 선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배심원제를 일정 비율 가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손학규 대표 및 정동영 최고위원 측은 100%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로 민주당 여성위를 중심으로 여성 인사들은 ▲지역구 후보 30% 할당 ▲당내 경선시 여성 후보에 대한 20% 가산점 부여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 사퇴 조항은 당 골간 조직을 흔드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개혁특위는 4일 전체회의의

공동대표인 천정배 최고위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손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의미가 불분명해 오히려의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대북정책을 수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인 손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 관련 발언은 일절 하지 않으며 확전을 자제했다. 정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희방 2012 출범식에 참석했다가 이날 종국 방문 길에 오르는 손 대표에게 "출범식에 참석해 줘 감사하다. 중국 잘 다녀오시라"고 덧붙였고, 손 대표도 회의 도중 자리를 뜨면서 "비행기 시간 때문에 양해해달라"며 정 최고위원에게 웃으며 악수를 건넸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말 몇마디 갖고 자중지란 말자"

민주 '대북 포용정책' 갈등 봉합 국면

포용정책과 관련,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의 손학규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으로 충발된 당내 갈등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자중지란 말 할 필요가 없다는 당내 여론이 확산한 때문이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당내에 논란이 일어나 유감스럽다. 당의 정책은 한두 사람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 것 이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논란으로